

# 12월 농업계 정세 전망과 과제

|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 |

## 1. 한-미 FTA 5차 협상...농업 부문 추가 양보 여부에 촉각

○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태나 주 빅스카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총 19개 분과(2개 작업반 포함) 중 상품, 농업 등을 포함한 총 16개 분과회의가 열렸다. 정부조달 분과와 위생검역 분과(SPS), 섬유분과 역시 12월중 별도로 분과회의를 진행하였다.

○ 농산물 협상에서는 특히 이번 5차 협상 이후부터 쇠고기 등을 포함한 민감 농산물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 분야는 민감품목에 대한 협의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미국 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에 협상력을 집중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 타협 가능한 대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2년여 만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어 반송될 예정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보호무역 성향이 짙은 요구들을 강도 높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 측이 협상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의회로부터 한-미 FTA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한국 측이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으나, 우리측이 미국으로부터 미미한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이런 작은 양보를 부풀려, 한-미 FTA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국내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번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측이 유일하게 유리한 섬유 분과 협상을 접겠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계산할 때 우리 측이 섬유 분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연간 20억 달러, 무역구제 분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연간 23.5억 달러로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측이 섬유 분과에서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확실한 반면, 무역구제 분과의 실제 이득은 연간 2억 달러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 2. 정부의 한-미 FTA 저지 투쟁 강경 대응 방침의 문제점

○ 지난 11월 22일의 한-미 FTA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지역의 시위대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으며, 시청·도청 등의 관공서 등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빌미로 정부와 경찰은 불관용의 원칙을 천명하며 불법·폭력적 집회는 원천봉쇄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하였다.

○ 실제 지난 11월 24일에는 한농연 강원도연합회와 경상북도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으며, 집회 가담 농민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일부는 구속되었다.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한-미

FTA 저지 농협개혁 촉구 농축수산인 결의대회'가 경찰의 저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2일 한-미 FTA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련의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 한-미 FTA 반대 단체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폭력집회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손배소를 제기하며,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한-미 FTA 반대 여론을 공권력으로 억누르고 국민 여론을 정부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 물론 11월 22일 총궐기대회 당시의 물리적 충돌과 시설 파손과 같이 시위가 격화되었던 문제점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충분한 피해 분석과 광범위한 농민 여론 수렴을 통한 협상 전략 마련과 대책 수립 등은 도외시한 채 밀실·졸속 협상으로 일관하며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억눌러 온 정부와 개방론자들의 잘못된 대응이, 불행한 이번 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11월 24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EU(유럽연합)간의 FTA를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들의 동의가 없는 동시다발적 FTA 확장 전략을 강행하고 있다. 축산물, 낙농제품, 가공식품, 와인 등에서 강세를 보이는 EU와의 FTA가 국내 고부가가치 농업의 미래마저 암담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저지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 3.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선고공판 12월 21일로 예정...경영복귀 시도 노골화

○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11월 14일의 공판에서 징역 7년 몰수 3억원의 검찰 구형을 받았으며, 12월 21일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에서, 11월 22일까지 정대근 회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 그럼에도 정 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농협중앙회 이사회를 의장 자격으로 주재하고, 농협경제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였으며, 24일에는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까지 주재하는 등 경영 복귀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 일부 인사가 정대근 회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파문이 일었으며, 법원마저 8월 검찰 구형 이후 3개월 이상 재판일정을 연기하며 부도덕한 비리 농협 수장의 경영 복귀 시도를 사실상 용인해주는 인상을 주었다.

○ 정대근 회장의 각종 비리 문제가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농협 개혁 관련 논의와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대근 회장과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의 피땀 어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불미스러운 일을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